

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재개 요청

광주·전남·전북-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광주시, 복합쇼핑몰 예정지 교통인프라 등 21개 사업 지원 요구 전남도, 쌀 초과물량 시장 격리·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등 건의 추경호 원내대표 "지역 숙원사업 해결 예산 확보에 힘 모으겠다"

25일 광주·전남도와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의 회를 열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출범 후 중단된 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재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전북도 단체장 등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지역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특히 현안으로 갖고 계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몇 개월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나름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면서 "설명 듣고 함께 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함께 실천해 드리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날 국민의힘에 주요 현안 10건과 국비 지원 사업 11건 등 총 21건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요 현안인 ▲광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인프라 신속 확보 ▲기후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과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비 지원 ▲인공지능 전환(AI)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GIST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광주 설립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신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께서 광주·전남의 최대 지역발전 전략 사업이자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민·군 통합 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적극 나서도록 지시해 주셨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기정 광주시장, 김광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을 2025년 ODA용으로 선제 매입하고, 올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 톤에 대한 신속한 시장 격리 등을 건의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

별법,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호남고속철도 2 단계 사업, 순천 K-디즈니 조성 위한 인력양성과 콘텐츠 제작,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협조와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며, 전남에 힘을 실어줄 것을 굳게 믿는다"면서 "전남이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찰 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 '명품백 사건' 새 국면

김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 검찰, 최종 처분 고심 깊어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목사와 최 목사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4개월 가까이 집중 수사한 끝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물 제공자인 최 목사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최종 결론 전 이 전 총장은 김 여사를 정부 보안 청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지만,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위원 만장 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연합뉴스

"일·가정 양립 앞장 중소기업 세제 혜택 검토"

윤 대통령, 인구비상대책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제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책자금 지원, 인적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정

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쉬고 나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 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대기환경분야